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청와대

한반도 전쟁 아픔 딛고 68년만에 '영구평화' 오나

남북미 3국 만나 '종전선언' 할지 관심

남북은 4·27 평화협정 준비 '착착'

◆12일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본격 시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전날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한 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DC로 이동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인민군 차수)의 워싱턴DC 방문 이후 18년 만에 미국을 찾은 북측 최고급 인사다.

김 부위원장의 트럼프 예방, 김 위원장 친서 전달, 트럼프 대통령의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인 등으로 자칫 불투명해졌던 북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같은 날 청와대도 김의경대변인 이름을 댄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써 북미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계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개최일을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북미 양국은 실제 정상회담 전까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 모습이다. 이미 문 대통령과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

한국전쟁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줬던 6월이 이번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우여곡절 끝에 정상회담을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미 3국 정상 '종전선언'까지 성사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남과 북은 지난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을 잇따라 열기로 합의하며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전쟁의 핏빛으로 얼룩졌던 6월 한반도가 평화를 향한 푸르름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는 모습이다.

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이를 장착해 쓸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처리 또는 폐기 문제, 그리고 핵 실험

등 추가 개발 금지 등이 핵심이다.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체제 보장의 방법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미래포럼 강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안에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장소와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국외 반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장성급·적십자 회담 등 '교류 물꼬'

판문점 남측과 북측 지역에서 각각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두 차례나 만나며 '우애'를 다진 남북도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연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교류 준비에 착수했다.

남북은 오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

성급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중' 개최가 적시된 합의사항이지만 결국 6월로 밀리게 됐다. 나흘 뒤인 18일에는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논의할 체육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또다시 나흘 뒤인 22일엔 금강산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된다.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리는 상봉 행사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 점검 등을 위해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가 다소 밀리는 모양새지만 당초 약속했던 '6·15 남북공동행사'도 열기로 했다. 다만 공동행사를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로 치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고위급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일정이나 양측 사정을 감안할 때 오는 6월 15일에 맞춰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인식의 교환이 있었다"면서 "(6·15 행사에 대해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오늘 논의된 것을 토대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더 정리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과 같은 남북경제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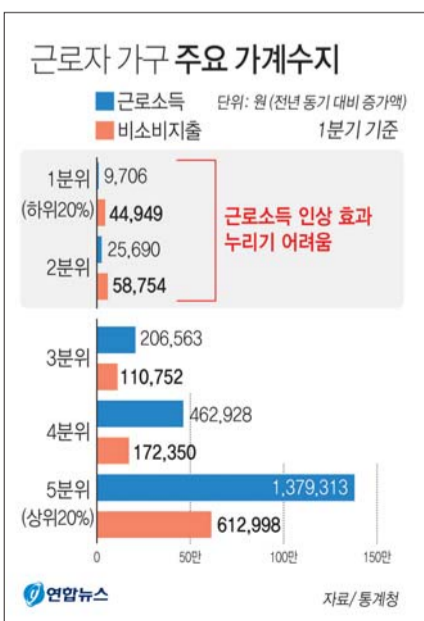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발전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대북)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과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기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 월급보다 세금·이자 더 늘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올해 1분기 저소득 근로자 가구는 월급보다 세금과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증가혜택이 상위 60%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와 조세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06원 오르는데 그쳤지만, 세금(경상조

세+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은 2만6277원 늘었다.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경조사비 등 가구 간 이전 지출과 종교단체·사회단체 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 등을 합하면 소득 중에서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돈인 '비소비지출액' 규모는 더 커진다.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액은 1년 전보다 4만4949원 늘어 근로소득 증가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만5690원 늘어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2만5473원)을 약간 웃돌았다. 하지만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에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을 더한 비소비지출은 5만8754원 늘었다. 2분위 역시 근로소득 인상의 효과를 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인상 효과를 누릴 정도로 충분히 올랐다. 이들의 가구 근로소득은 137만9313원 불어났

고 비소비지출은 그 절반이 못 되는 61만 2998원 증가했다. 4분위와 3분위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각각 46만2928원, 20만6563원 상승했고 비소비지출은 17만2350원, 11만752원씩 올랐다.

5분위 근로자 가구만큼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근로소득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에 비추면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 선순환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자체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세나 준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